

서울시, ESG 경영 선순환 강화 바탕으로 기업·공공기관 가치창출 지속성 확대해야

ESG 경영, 기후위기·투자자 관심에서 촉발 ... 기업 생존전략과 강하게 연결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시민과 투자자, 공공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기존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별 요소와 기업 경영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많은 개념이 활용되어왔지만, ESG 경영은 기후 위기 관련 국제 사회의 요구(탄소중립)와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중대성 평가) 등에서 촉발된 것이기에 기업의 생존전략과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ESG 경영에서는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사회적 규범 아래에서 기업의 이윤 창출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기업의 활동이 사회와 환경, 이해당사자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주요한 관심사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고, 관련한 핵심 지표(비재무 지표)를 관리하며, 이를 이해당사자와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ESG 경영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SG 경영 선순환 강화해 기업·기관 가치창출 지속성 확대가 서울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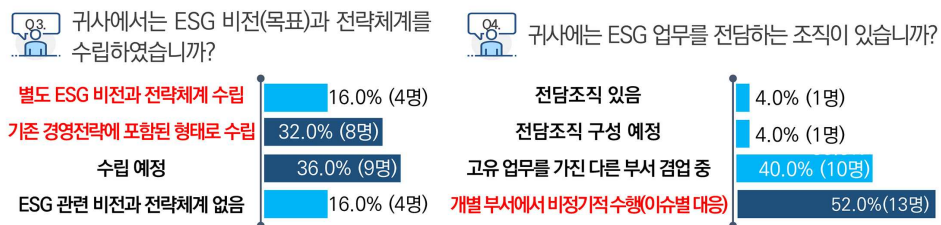
ESG 경영은 시장에서 출발한 개념이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의 ESG 경영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려 하거나, 규제를 통해 시장행위자들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장행위자들이 ESG 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실현하도록 돕고, ESG 경영이 또 다른 시장 왜곡(그린 워싱, 사다리 건너차기)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과 기관은 ESG 경영을 통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면

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의 복리후생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와 도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정책으로서 ESG 정책은 이러한 ESG 경영의 선순환을 강화하여 기업과 기관의 가치 창출 지속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관련하여 기업과 기관은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지표를 관리하며, 대내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 ESG 경영의 높은 인식이 실제 기관 운영시스템으로 반영 안돼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은 [그림 1]과 같이 대체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중요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ESG 경영의 중요성 인식이 실제 기관 운영 시스템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은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자 원하는 지원책으로 재정적 문제를 선택했다. ESG 경영관련 전담인력이 없고 ESG 관련 업무를 고유 업무와 병행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기관 차원의 ESG 대응이 이슈별 대응에 그치기 쉽고 단기적 관점으로 진행되기 쉽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예산과 인적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인력구조 개편이 병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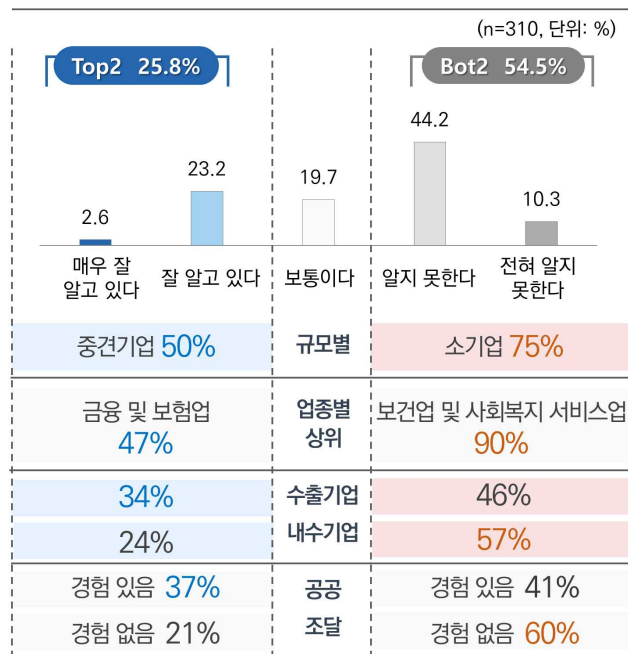


[그림 1]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 응답결과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관련 인식 부족하고 정부 지원사업 인지율 낮아

공공부문과는 달리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전반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소기업·내수기업·공공조달 경험이 없는 기업일수록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중소·중견기업에서는 ESG 경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거나 실행 체계를 갖춘 곳 역시 적고 ESG 성과도 낮았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48%)이었다. 정부 지원사업의 인지율은 사업별로 10~20%에 불과하며, 지원사업 활용 경험도 1~6%에 불과하였다. 다만,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에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경영 인식 재고를 위한 교육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ESG 경영을 실제로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2] 중소기업 ESG 경영 인지 응답결과

서울시, ESG 경영 도입·실천으로 ESG 경영 확산 겨냥한 리더십 강화해야

서울시가 ESG 경영 확대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그림 3]과 같다. 우선 공공부문은 경영평가 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하여 ESG 경영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한 인센티브로 ESG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료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ESG 경영 가이드라인과 ESG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 리스크를 포함한 중대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행정과 사업 영역에서의 ESG 도입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재무보고서에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포함하고 ESG 연례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후예산제의 개념을 확대하여 시정 활동 영역에 대한 ESG 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 이렇듯 서울시는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서울시의 행정과 사업영역에서도 ESG 경영 요소를 도입하고 실천함으로써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공공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ESG 요소를 추가하여 ESG 경영 민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과 ESG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해야 한다.

구분	공공기관과 공기업 ESG 경영 확대	ESG 경영 민간 확대 지원
정책 목표	(변화하는 기후환경 반영, 중장기적으로) 중대성 평가 관점에서 바라본 기관(기업)의 가치 창출 지속가능성 확대 (선순환) : ESG 경영 → 기관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 + 기관의 가치 (사회복리후생) 창출 지속 → 사회복리후생 극대화 + 환경영향 최소화 → 지속가능한 도시	(선순환) : ESG 경영 →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 + 기업의 가치 (지속가능한 현금흐름) 창출 지속 → 지역경제 활성화 + 환경영향 최소화 → 지속가능한 도시
주체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기관) : ESG 경영 전략 수립, 핵심 지표 관리, 대내외 정보 공개 ▪ 정부 (지자체) : ESG 선순환 강화를 위한 감독과 지원: 시민, 투자자의 요구 → ESG 경영 확대 → 기업의 리스크 관리 + 환경 영향 최소화 → 지속가능한 도시, 사회, 국가 - '그린 워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 (대기업, 투자자) : 중앙정부 - ESG 투자 기준 강화, 공급망 관리 등이 '사다리 건너자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취약 산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 정보 제공 +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지방정부)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정 ▪ (단기) 서울시 공기업 핵심가치평가 지표 개정 ▪ (단기) 산하기관 ESG 진단, 경영전략 수립,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 ▪ (단기) 중대성 평가 → 시 재무보고서에 기후 리스크 포함 ▪ (중장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ESG 중심으로 재편, 지표 추가 및 개선) ▪ (중장기) 기관별 특성에 맞는 ESG 가이드라인 작성, 공공기관 ESG 평가 방안 마련 ▪ (중장기) 시정 활동 영역 (Government operation)에 대한 ESG 평가(기후예산제 개념 확대), 서울시 ESG 보고서 발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서울시 공공조달 평가항목 개정 ▪ (단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교육, 기술 및 재정지원 (ESG 진단,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등) ▪ (단기) 여의도 녹색금융 특화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 ▪ (중장기) 공공조달 평가항목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ESG 우수기업 우대 항목 추가) ▪ (중장기)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플랫폼 구축 (평가 방법론, 공급업체 대응 지원, 공시 지원, 컨설팅 지원 등) ▪ (중장기) ESG 기금 마련 (ESG 채권), 투자정책에 ESG 반영

[그림 3] ESG 정책 과제

서울시,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경영 지원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 바람직

국제적으로 산업계 표준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공급망 관련 ESG 정보공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ESG 경영을 도입하거나 관련 지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망 전체로 확대된 ESG 경영 관리 추세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하여금 더 이상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미룰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공시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허가권(social license)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ESG 평가방법론을 제공하고, ESG 공시를 지원하며, 공급업체에 대한 ESG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으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디지털(Digital) ESG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도 지원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수의 중소·중견기업들도 ESG 경영 관련 기술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디지털 ESG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공시를 지원하거나 관련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정책성과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녹색채권 발행, 여의도에 녹색금융특구 지정 등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필요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자원마련 역시 중요하다. 도쿄, 토론토 등에서는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로 녹색채권을 발행해 ESG 도입과 실천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기금을 ESG 도입 및 실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녹색채권이나 사회적채권과 같이 ESG 경영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런던에서는 시티오브런던을 녹색금융 특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녹색금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금융업은 산업계 중에서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ESG

경영과 관련해 가장 앞서나가는 분야이기에, 서울에서도 녹색금융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수용성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에 여의도에 녹색금융 특구를 지정하고 금융 감독기구, 여의도에 입주한 개별 금융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녹색금융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서울시, 금융 감독기구, 여의도에 입주한 금융업체는 금융업체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선언한다. 둘째, 금융사는 건물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탄소중립 로드맵)를 설정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셋째, 금융사는 기후변화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를 관리한다. 넷째, 금융사는 금융 감독기구,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녹색금융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촉진한다. 서울시는 금융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 감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제공한다.